與, 권력기관 개혁 질의 ··· 野, 부동산·자녀 병역 공세

장관 후보 청문회…'행안'전해철, 도곡동 아파트 매매 과정 도마위 '복지' 권덕철 "코로나 백신 순차 접종시 4차 유행 막을 수 있다"

22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회에서는 부동산과 장남 병역면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도입 계획대로 순차적으로 하면 향후 코로나19 4차 유행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본 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이날 전 장관 후보자 인 사청문회에서는 부동산과 장남 병역면제가 검증대 를 달궜다. 야권은 현 정권의 뇌관인 부동산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책 질의에 집중하며 전 후보자의 개인 신상·도덕성 검증에 거리를 뒀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전 후보자가 매입한 43 평 아파트 대신 동일 아파트 단지 내 50평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했다며 "43평과 50평이 방 구조와 개수는 똑같다. 집을 옮긴 이유가 납득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전 후보자는 과거 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 아파트 1채(43평)를 6억8000만원에 매입, 실

거주하지 않다가 13년이 지난 2018년 22억원에 매 가해다

전 후보자는 안산 이사 후에는 고3 장남이 혼자 43평 아파트에 거주했던 배경에 대해서는 "자녀가 초등학교 때부터 변호사 생활을 한 강남에서 생활 했고, (안산 이사 당시) 아들이 고3이라 전학은 현 실에 맞지 않는다 생각했다"고 답했다.

전 후보자의 장남이 5급 전시근로역(척추측만 증)으로 현역 면제 처분을 받은 것을 두고도 신경 전이 벌어졌다. 2013년 4급 공익근무요원 소집대 상이었던 그는 2015년 소집 후 재신체검사 대상으로 귀가 처분을 받았다.

자가격리 중인 이영 의원을 대신해 나온 박형수

의원은 "2013년에는 (척추가 휜정도가) 38° 였는데 재검 때는 42° 였다"며 당시 엑스레이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전 후보자는 "논산훈련소에 입소해서 계속 통증을 호소하니까 규정상 5~7일 이내에는 다시 신검을 하는 조치가 있는 것 같다"며 귀가 처분에 대해 해명해다

민주당은 전 후보자를 엄호하며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정책질의를 이어갔다. 한병도 의원은 "전 후보자가 고위공직자 인사 배제의 7대 원칙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재난을 총괄하는 행안부이기 때문에 코로나19 극복에 총력 대응해주길 당부한다"고 했다. 한정에 의원은 전 후보자가 국회

정보위원장을 맡으며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는 점을 언 급하며 "경찰의 대공수사 역량이나 안보 공백 우려 가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묻기도 했다.

또한 이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코로나 19백신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유럽이나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백신을 접종하더라도 예방효과가 60%정도이고, 그 효과도 대개 겨울이 끝나갈 때 나온다"며 "우리나라도 코로나19의 다음 유행을 막기위해 백신을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차적으로하면 다음 유행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전해철 "재난 선제적 대응·약자 안전망 확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재보선 경선를 다음달 초 확정

야권 단일화 추이 따라 변동성…당내 후보군 변화 '촉각'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재보선 경선물(규칙) 확정 시기를 내년 1월 초 이후로 늦줬다.

코로나19 재확산과 여권 후보군이 구체화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한 것인데, 야권의 후보 경선이 '붐업' 조짐을 보이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재보선기획단은 22일 오전 회의를 열어 경선물과 일정을 논의했으나, 결정 시기를 내년으로 늦추기로 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기획단은 연내에는 추가 회의를 열지 않고 1월 7일께 회의를 열 계획이다. 이르면 이날 경선물이 확정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으나 그 시기가 다소 늦춰진 것이다.

당 관계자는 "아직 선수(후보)들이 안 나온 상황 이고, 코로나 확산 상황에서 결정하기는 이르다는 의견들이 많았다"며 "선수들이 나온 뒤에 하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최대 격전지가 될 서울시장 후보군의 경우 민주 당에선 우상호 의원만 출마선언을 하고 박영선 중 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박주민 의원은 고심 중인 상 황이다. 최근 거론되기 시작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도 이렇다 할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반면에 야 권에서는 '반문(반문재인) 연대'를 기치로 건 국민 의당 안철수 대표의 등판으로 경선 흥행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 오세훈 전 시장 등 거물급 인사의 참전 가능성도 거론된다. 야 권 단일화 과정이 변수로 남긴 했지만 민주당으로 서는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경선률 결정 시기가 늦춰지면서 민주당 후보군에 도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야당 의 단일화 진전 추이에 따라 그에 걸맞은 경쟁력과 체급을 갖춘 인사가 여당 내에서 부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야권 안철수·나경원 접전

한길리서치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여권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단독선두를 달리고 야권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선두 접전을 벌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19~20일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여 800명을 대상으로 '범여권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박 장관은 16.3%를 얻었다. 추미에 법무부 장관은 8.8%로 뒤를 이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7.2%, 우상호 의원은 6.6%로 집계됐다.

'범야권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에서는 안 대표가 17.4%로,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16.3%로 양 강을 형성했다. 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6.6%)이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중앙선 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고하면 된다. /연합뉴스

데데데 여의도 브리핑

김회재,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선정 '국감 국리민복상'

더불어민주당 김회재(여수을) 국회의원은 22일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선정하는 '2020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사 우수의원으로 뽑힌 데 이어, 전남에서 유일하게 NGO 모니터단 우수의원에 선정되기도 했다. 270여개 시민사회 단체가 참여한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은 22년간 국정감사를 평가・분석해

왔으며, 각 분야 전문가들이 평가위원으로 구성돼

김 의원은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국정감



매년 상임위별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해 오고 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치러진 21대 국회 첫 번째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안전' '서민' '균형 발전' 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들으며,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질의와 제 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높은 평가받았다.

서동용 "구례군, 3차 도시재생 뉴딜 사업 선정 환영"

더불어민주당 서동용(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은 22일 "구례군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0년 3차 도시재생 뉴딜 신규사업'에 최종 선정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에 전남 구례군은 지리산·섬진 강·넓은 들판의 3대(三大)와 수려한 경관·넘치 는 소출·넉넉한 인심의 3미(三美)으로 대표되는 구례 특화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통해 지역특화산 업 육성, 전원도시 경쟁력 회복, 공동체 활성화, 주거복지, 5일시장 현대화 사업 등을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해 선정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5년간 전남 구례군 구례읍 5일시 장 일원에는 국비 150억원 을 포함한 271억원의 마중 물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 며 이후 지자체, 부처협 업, 공기업투자, 기금 등 총537억원이 투입될 예정

이다. 이를 통해 지난 집중호우 피해 지역의 빠른 회복 더불어 도시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 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은미, 중대재해 현장조사 유족 대리인 참여 보장 법안 발의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은 22일 "중대재해의 현장조사 및 작업환경측정시 유족 대리인 등 전 문가 참여를 보장하고, 쿠팡발 코로나19 감염으 로 인한 전파 감염자까지 산업재해가 인정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과 '산업재해보상 법 일부개정안'(일명 '쿠팡 방지2법')을 대표발 의했다"고 밝혔다.

현산업안전보건법상 유족이 선임한 대리인 등이 작업환경측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때문에 지난 6월1일 쿠팡천안물류센터 구내식당에서 조리보조원이 급식실 바닥 청소도중 쓰려져 병원 후송 치료 중 사망한 사건에 대해 유족 대리인 참석을 사업장 보안



또 산업재해보상법에서 여성근로자가 임신 중에 업무상 유해요소에 노출돼 선천성 질환이를 출산하더

라도 그 선천성 질환과 업

무상 요인의 인과관계가

등을 이유로 불허했다.

밝혀진 경우와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병으로 인하여 근로자와 동거하는 사람에게 감염병이 전염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고 있어 업무상 재해를 보상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